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조세 및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

— 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

반 정 호*

I. 머리말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화 및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 임금격차 확대 등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양극화’라는 말로 대변되 듯이 빈곤의 고착화·세습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칫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원종학·성명재, 2007).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단순한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확대는 경기변동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불평등의 확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이념이 보편화되면서 불평등 완화 및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생계 유지 등의 빈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물론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관점에 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이정우, 1997).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공적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고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복지지출 증가 등을 통해 분배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비교적 최근의 소득분배 현황과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통계청의 「(도시)가 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배 상태를 분위배율, 지니계수, 분위점유율 등의 전통적인 소득불평등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절대적·상대적 빈곤선을 적용한 빈곤계층의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비중과 그 변화를 파악한다. 아울러 조세(직접세)와 사회보장지출의 재분배효과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의 소득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자영자 및 무직자 가구(근로자와 가구)를 제외한 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다. 분석기간은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경우 1996~2007년까지로 하고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된 2003~2007년까지는 전국근로자 가구(2인 이상)를 분석한다. 또한 조사대상이 1인 이상으로 확대된 2006년부터는 1인 이상 도시 및 전국근로자 가구로 분석대상을 확대한다.

II. 연구방법

1. 소득의 구성과 가구균등화 지수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 소득관련 구성과 범주는 <표 1>과 같이 정의된다. 총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과 경조소득이나 퇴직금 등의 비경상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경상소득은 가구주와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계한 금액을 의미한다. 시장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공적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수혜금액 등의 공적이전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공적연금 및 기타 사회보험 납부액)을 차감한 것이다.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이용한 분배지표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표 1> 가계조사의 소득구성과 범주

		구성내역	
소 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 재산소득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타 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 비경상소득
총 소 득		경상소득+비경상소득	
경 상 소 득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공·사적이전소득	
시 장 소 득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경상소득-(직접세+사회보장부담금)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분배지표의 비교를 통해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가구의 규모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는 균등화 척도를 사용했으며, 가구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는 방식의 개인가중치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되는 소득범주별 금액이나 분포는 공식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수치와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2. 소득불평등 지표와 빈곤선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소득의 분위배율 및 분위점유율, 지니계수 등이 대표적이다. 5분위배율은 전체 표본가구의 소득수준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2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분위점유율은 전체소득에서 해당분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지니계수는 소득순으로 인구의 누적분포와 소득누적비율의 로렌즈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분배균등선(45°선)과 로렌즈곡선 사이의 면적비율로 구해지며,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Gini = \frac{1}{\mu N^2} \sum_{i=1}^N \sum_{j=1}^N y_i - y_j$$

여기에서 μ 는 소득의 평균값, y_i 와 y_j 는 i 번째 및 j 번째 가구의 소득, 그리고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한다.

표본가구의 절대적·상대적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선을 이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했다. 절대적 빈곤선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였으며, 최저생계비가 공식적으로 공표된 2000년 이전 시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차액을 일률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생계비를 산출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비중을 절대빈곤율로 정의하였다.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OECD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소득불평등과 빈곤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6년 0.285 수준에서 2007년 현재 0.306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꾸준한 증가를 보였고 그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2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악화된 지니계수는 그 이후 뚜렷한 개선 없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인 이상 도시근로자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06년 0.305에서 2007년 0.309로 소폭의 증가가 나타났고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다소 악화되고 있다. 2인 이상 전국근로자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인 이상 도시근로자보다 높은 0.303(2003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7년 현재 0.308까지 증가하고 있다. 1인 이상 전국근로자까지 분석대상을 확대시켜 보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7년 현재 0.311로 전년(0.308)에 비해 소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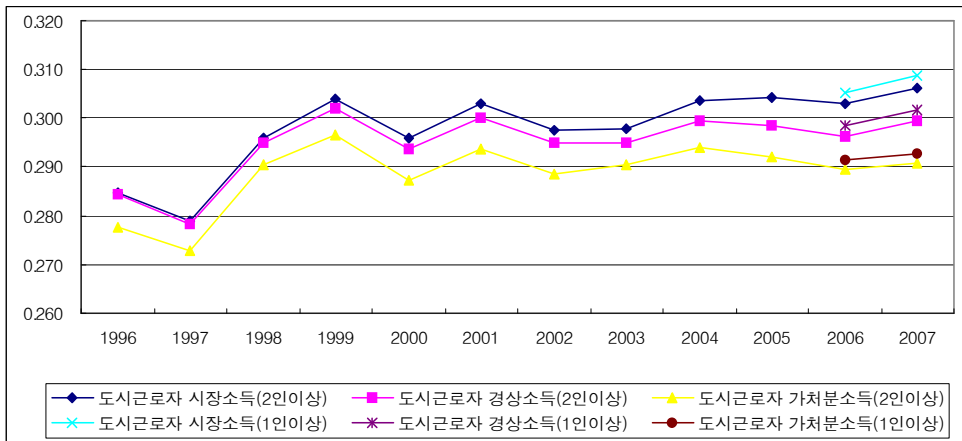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율(시장소득 기준)은 경제위기 이전인 1996년 4.6%에서 1998년 8.6%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를 기록하였고, 경제위기를 지난 2002년에 4.7%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6.9%까지 절대빈곤율이 증가했으며, 2007년 현재는 2년 연속 감소해 그 수치가

<표 2>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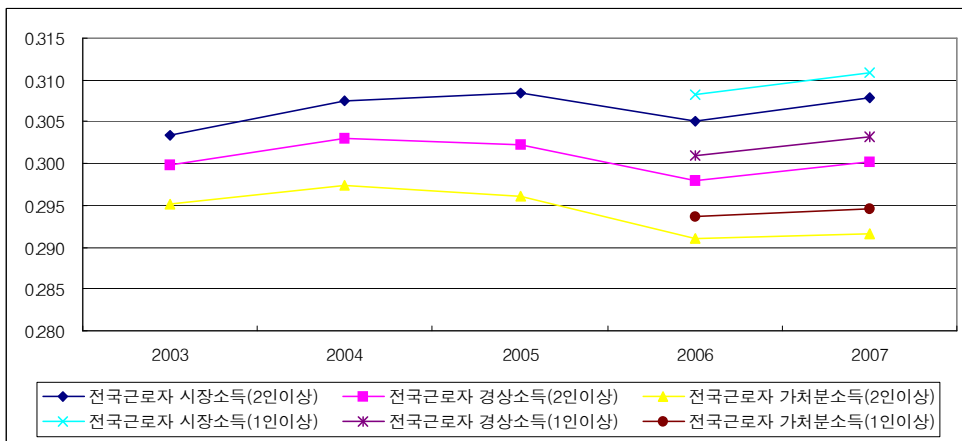
		2인 이상											1인 이상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	2007	
도시	시장소득	0.285	0.279	0.296	0.304	0.296	0.303	0.298	0.298	0.304	0.304	0.303	0.306	0.305	0.309	
	경상소득	0.284	0.278	0.295	0.302	0.294	0.300	0.295	0.295	0.299	0.299	0.296	0.299	0.298	0.302	
	가처분소득	0.278	0.273	0.291	0.297	0.288	0.294	0.289	0.291	0.294	0.293	0.290	0.291	0.291	0.293	
전국	시장소득									0.303	0.307	0.309	0.305	0.308	0.311	
	경상소득									0.300	0.303	0.302	0.298	0.300	0.301	0.303
	가처분소득									0.295	0.297	0.296	0.291	0.292	0.294	0.295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그림 1]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그림 2] 전국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5.6%까지 떨어졌다. 2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의 경우 2005년 7.3%까지 증가한 절대빈곤율은 2007년 5.9%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절대빈곤율과는 다르게 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가구비중인 상대빈곤율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999~2002년, 2006년은 미약한 감소, 시장소득 기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4년 12%를 상회한 상대빈곤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경상소득 기준으로도 11% 초반대에 머물러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2년 연속 상대빈곤율의 하락을 보였으며(2인 이상 도시근로자), 전국근로자 가구에서는 2004년 이후

<표 3> 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변화추이

			2인 이상											1인 이상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	2007
절대 빈곤율	도시	시장소득	4.59	4.05	7.79	8.55	6.90	5.82	4.70	5.90	5.91	6.78	6.17	5.60	6.31	5.69
		경상소득	4.50	3.90	7.62	8.19	6.42	5.25	4.17	5.26	5.11	5.70	4.87	4.44	5.00	4.51
		가처분소득	4.95	4.75	8.90	9.35	7.61	6.50	5.21	6.13	6.05	6.54	5.73	5.09	5.85	5.16
	전국	시장소득								6.59	6.52	7.30	6.56	5.91	6.69	6.01
		상소득								5.93	5.60	6.14	5.15	4.69	5.27	4.79
		가처분소득								6.93	6.64	7.02	6.01	5.44	6.11	5.50
상대 빈곤율	도시	시장소득	9.40	8.67	10.84	10.78	10.19	10.32	10.06	11.29	12.33	12.41	12.25	12.53	12.52	12.77
		경상소득	9.24	8.91	10.76	10.52	10.00	9.72	9.63	10.66	11.59	11.70	11.16	11.21	11.45	11.48
		가처분소득	9.05	8.57	10.50	10.42	9.87	9.66	9.46	10.43	11.33	11.37	10.98	10.88	11.25	11.22
	전국	시장소득								11.92	12.73	12.74	12.50	12.76	12.80	13.10
		경상소득								11.28	12.00	11.87	11.53	11.34	11.79	11.64
		가처분소득								11.10	11.70	11.62	11.28	11.09	11.55	11.46

상대빈곤율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1인 이상 도시 및 전국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확대하면, 도시근로자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2006년(6.31%)에 비해 2007년 5.69%로 전년에 비해 0.62%p 빈곤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도 전년대비 각각 0.49%p, 0.69%p의 절대빈곤율의 감소가 일어났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1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상대빈곤율의 경우는 1인 이상 도시 및 전국근로자 가구 모두에서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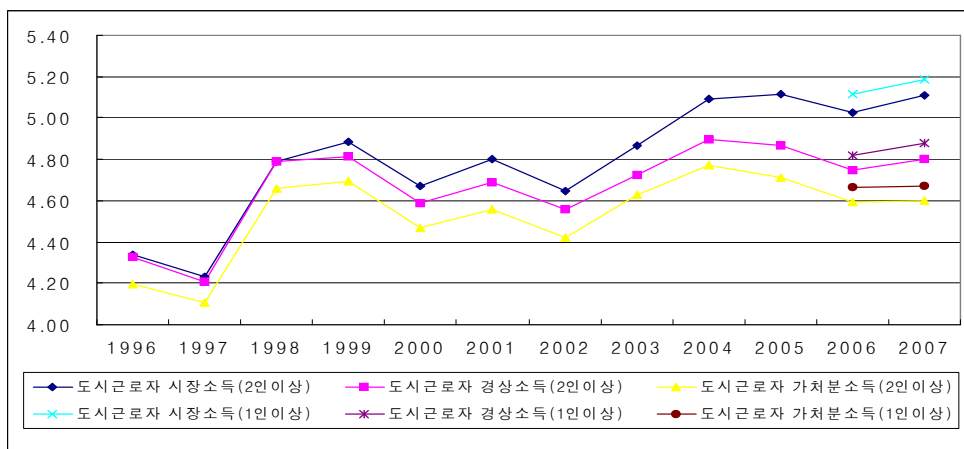
2. 소득분배 현황과 변화추이

<표 4>와 [그림 3, 4]는 도시 및 전국근로자 가구의 시장·경상·가처분소득 분위별 소득배율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시기인 1998년을 기점으로 5분위배율이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은 배율 악화추세는 2007년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시장소득, 5.11배; 경상소득, 4.80배; 가처분소득, 4.60배). 전반적으로 2003년과 2005년에 5분위 배율을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2006년에 다소 완화되다가 2007년에 다시 배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상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2004년 4.90배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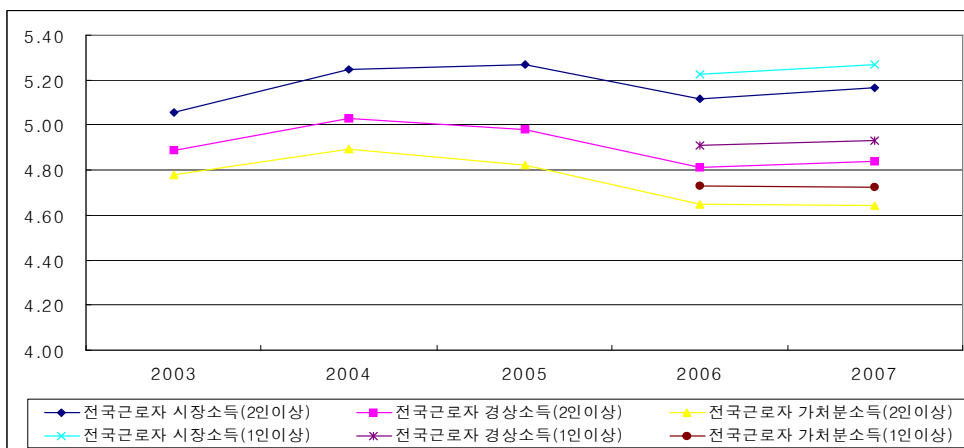
<표 4> 근로자 가구의 5분위배율의 변화

		2인 이상 가구											1인 이상 가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6	2007
도시	시장소득	4.34	4.23	4.79	4.89	4.67	4.80	4.65	4.86	5.09	5.12	5.03	5.11	5.12	5.19
	경상소득	4.33	4.21	4.79	4.81	4.59	4.69	4.56	4.73	4.90	4.86	4.75	4.80	4.82	4.88
	가처분소득	4.20	4.11	4.66	4.70	4.47	4.56	4.42	4.63	4.77	4.71	4.59	4.60	4.66	4.67
전국	시장소득	-	-	-	-	-	-	-	5.06	5.25	5.27	5.12	5.17	5.23	5.27
	경상소득	-	-	-	-	-	-	-	4.89	5.03	4.98	4.81	4.84	4.91	4.93
	가처분소득	-	-	-	-	-	-	-	4.78	4.90	4.82	4.65	4.64	4.73	4.72

[그림 3] 도시근로자 가구의 5분위배율 변화



[그림 4] 전국근로자 가구의 5분위배율 변화



높고, 2006년 4.75배까지 완화되다가 2007년 4.80배로 분배율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4년 4.77배에서 2007년 4.60배로 미약한 완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 4.59배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

2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5년까지 분배율이 악화되며, 2006년(5.12배)에 약간 감소하다가 2007년 5분위배율이 5.17배로 다시 증가한다. 경상소득 기준으로도 2004년의 5.03배로 가장 높았고 2006년에 4.81배까지 낮아졌다가 2007년 현재 4.84배로 분배율이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4년 4.90배로 가장 높았던 것이 2007년까지 4.64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가처분소득 기준 분배율의 증가를 보인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와 대조적인데, 최근 공적이전과 사회보장지출의 분배개선 효과가 도시보다는 읍·면부를 중심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도시근로자와 전국근로자 모두 시장소득의 분배율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하에서는 근로자 가구의 시장소득의 분배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표 5>는 근로자 가구의 분위별 월평균 시장소득과 5분위배율을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5> 근로자 가구의 분위별 소득과 분위배율(시장소득 기준)

(단위 : 천 원/월평균, 배)

		전 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 배율
도 시 (2인이상)	1999	1,326	534	879	1,169	1,544	2,538	4.75
	2000	1,390 (4.86)	562 (5.20)	930 (5.83)	1,224 (4.73)	1,608 (4.20)	2,627 (3.49)	4.67
	2001	1,478 (6.29)	589 (4.83)	967 (3.99)	1,286 (5.09)	1,714 (6.57)	2,830 (7.74)	4.80
	2002	1,554 (5.17)	635 (7.82)	1,027 (6.17)	1,357 (5.47)	1,799 (4.98)	2,952 (4.31)	4.65
	2003	1,590 (2.33)	616 (-2.99)	1,078 (5.03)	1,409 (3.88)	1,846 (2.58)	2,998 (1.55)	4.86
	2004	1,643 (3.33)	612 (-0.66)	1,101 (2.10)	1,459 (3.56)	1,926 (4.32)	3,117 (3.96)	5.09
	2005	1,663 (1.20)	617 (0.70)	1,109 (0.76)	1,485 (1.72)	1,949 (1.20)	3,154 (1.21)	5.12
	2006	1,724 (3.67)	648 (5.09)	1,146 (3.29)	1,536 (3.48)	2,031 (4.21)	3,258 (3.29)	5.03
도 시 (1인이상)	2007	1,798 (4.33)	673 (3.94)	1,192 (4.04)	1,591 (3.54)	2,092 (3.00)	3,440 (5.60)	5.11
	2006	1,714	636	1,136	1,526	2,022	3,252	5.12
전 국 (2인이상)	2007	1,790 (4.43)	663 (4.24)	1,183 (4.07)	1,582 (3.69)	2,086 (3.19)	3,436 (5.65)	5.19
	2003	1,574	587	1,049	1,383	1,819	2,967	5.06
	2004	1,632 (3.72)	587 (0.12)	1,076 (2.59)	1,434 (3.69)	1,898 (4.31)	3,082 (3.87)	5.25
	2005	1,666 (2.05)	596 (1.40)	1,088 (1.12)	1,461 (1.83)	1,921 (1.24)	3,138 (1.82)	5.27
	2006	1,730 (3.88)	632 (6.12)	1,130 (3.88)	1,516 (3.81)	2,001 (4.16)	3,235 (3.07)	5.12
전 국 (1인이상)	2007	1,768 (2.16)	656 (3.75)	1,169 (3.38)	1,564 (3.14)	2,063 (3.09)	3,388 (4.73)	5.17
	2006	1,696	620	1,121	1,508	1,994	3,240	5.23
	2007	1,763 (3.93)	644 (3.92)	1,159 (3.45)	1,557 (3.26)	2,059 (3.23)	3,396 (4.83)	5.27

주 : ()안은 증가율임.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시장소득은 1999년 1,390천 원에서 2007년 1,798천 원까지 증가했으며 3.9%의 평균증가율을 보여준다. 하위 20%의 1분위계층의 시장소득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6%에 가까운 증가를 이어오다가 2003년과 2004년 시장소득의 하락을 경험하고 2005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또한 1999~2007년까지 도시근로자 분위별 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3.9%의 시장소득 증가가 나타난 반면, 1분위의 저소득층에서는 3.0%의 비교적 낮은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2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도 1분위와 2분위의 시장소득 평균증가율이 각각 2.9%와 2.7%로 4분위(3.2%)와 5분위(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후술하게 될 저소득계층의 소득하락에 기초한 분배악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을 추세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는 2002년과 2006년 5분위배율이 다소 감소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분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위기 시기였던 1999년 시장소득의 5분위배율은 4.75배에서 2003년 4.86배, 2007년 5.11배까지 증가해 경제위기를 지난 이후 시점에서도 분배율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1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5분위배율은 2006년 5.12배에서 2007년 5.19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분배율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인 이상 전국근로자의 시장소득 분배율도 2006년 5.23배에서 2007년 5.27배로 다소 확대된다. 특히 2006년에 다소 완화된 분배상태가 2007년에 다시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1분위 소득의 증가율 하락과 5분위 소득의 증가율 상승이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6>은 근로자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10분위 소득점유율의 변화추이 및 10분위배율을 보여주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시기인 1998년과 1999년의 10분위배율이 각각 8.02배와 8.113배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외환위기 이후 시기에 다소 감소하다가 2003년에 8.26배와 2005년 8.77배까지 증가하고 2007년 최근에는 8.59배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분배율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2001년의 경우에는 7분위 이하의 거의 모든 계층이 점유율 하락으로 각종 불평등 지표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1분위의 점유율 하락이 큰 폭으로 일어나 10분위배율의 악화의 결과로 이어진다(이병화·강신욱 외, 2007).

[그림 5]와 [그림 6]은 2인 이상의 도시근로자 가구와 전국근로자 가구의 시장소득 1분위 점유율과 10분위 점유율의 변화추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의 1분위 점유율의 전반적인 하락과 10분위 점유율의 상승이라는 대조적인 추세가 분배율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분위 소득점유율의 하락은 경제위기 시기인 1998~1999년과 2003~2005년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10분위 소득점유율의 상승은 경제위기 시기에 특

<표 6> 근로자 가구의 시장소득 10분위 점유율 추이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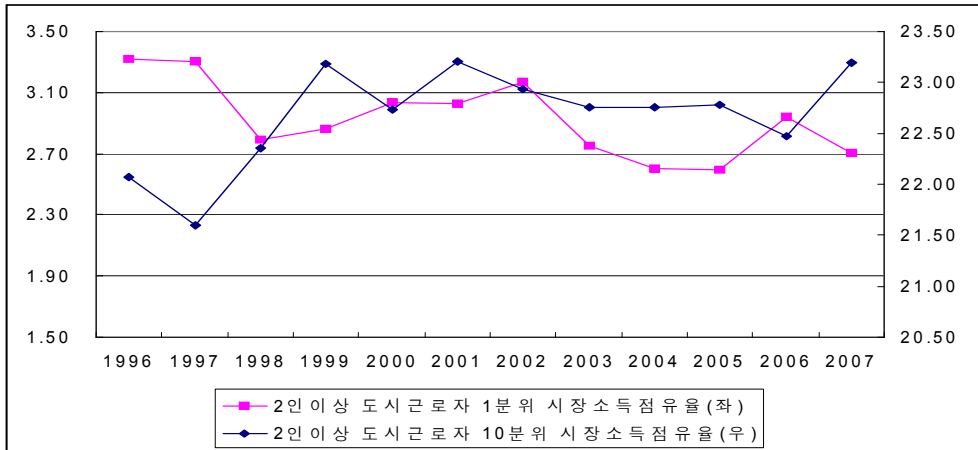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0분위 배율
도시(2인이상)	1996	3.32	5.20	6.23	7.27	8.32	9.47	10.79	12.42	14.90	22.07	6.66
	1997	3.31	5.33	6.37	7.33	8.20	9.65	10.80	12.46	14.95	21.59	6.53
	1998	2.79	5.04	6.24	7.26	8.30	9.46	10.85	12.55	15.16	22.36	8.02
	1999	2.86	4.96	6.07	7.09	8.18	9.38	10.77	12.46	15.04	23.18	8.11
	2000	3.04	5.05	6.19	7.19	8.23	9.38	10.71	12.43	15.05	22.74	7.49
	2001	3.03	4.93	5.97	7.15	8.09	9.31	10.71	12.50	15.11	23.21	7.66
	2002	3.17	5.00	5.98	7.23	8.15	9.30	10.71	12.46	15.06	22.94	7.23
	2003	2.75	4.99	6.29	7.28	8.23	9.34	10.92	12.49	14.95	22.75	8.26
	2004	2.60	4.85	6.15	7.22	8.33	9.47	10.85	12.60	15.18	22.76	8.75
	2005	2.60	4.82	6.10	7.24	8.32	9.54	10.88	12.55	15.18	22.78	8.77
	2006	2.94	4.95	6.14	7.23	8.31	9.49	10.90	12.56	15.00	22.48	7.65
2007	2.70	4.77	6.11	7.17	8.27	9.32	10.91	12.49	15.07	23.19	8.59	
도시(1인이상)	2006	2.62	4.79	6.07	7.19	8.30	9.50	10.93	12.65	15.15	22.80	8.69
	2007	2.66	4.74	6.07	7.12	8.28	9.42	10.80	12.49	15.14	23.28	8.76
전국(2인이상)	2003	2.62	4.90	6.21	7.24	8.27	9.45	10.77	12.54	15.00	23.02	8.80
	2004	2.52	4.75	6.04	7.26	8.31	9.47	10.78	12.71	15.25	22.91	9.11
	2005	2.51	4.74	6.06	7.20	8.28	9.49	10.90	12.53	15.24	23.03	9.16
	2006	2.59	4.83	6.07	7.21	8.30	9.51	10.90	12.61	15.15	22.84	8.81
	2007	2.67	4.75	6.07	7.14	8.28	9.43	10.81	12.53	15.12	23.21	8.70
전국(1인이상)	2006	2.87	4.92	6.12	7.18	8.32	9.48	10.90	12.59	15.02	22.58	7.86
	2007	2.91	4.90	6.07	7.22	8.26	9.39	10.75	12.43	15.00	23.07	7.93

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0분위 점유율은 2001년 이후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다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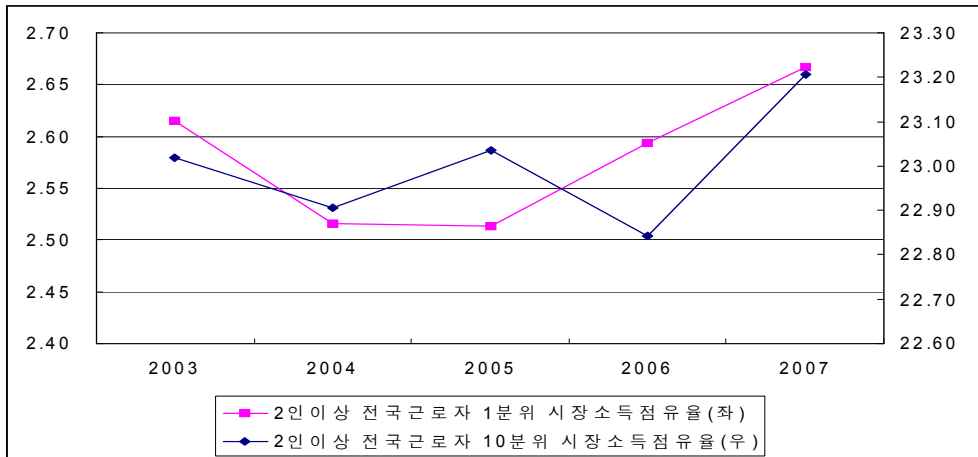
2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의 10분위 배율은 2003년 8.80배에서 2005년 9.16배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국 근로자 가구의 1분위와 2분위 저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 시기 분배율의 확대를 주도했고, 2005년 이후 1분위 소득점유율의 상승이 분배율을 다소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1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는 2006년 10분위배율이 8.69배에서 2007년 8.76배로 다소 상승했고, 1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 역시 2006년 7.86배에서 7.93배로 소폭 증가해 최근 1인 이상 근로자 가구에서 분배율 악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요인으로 집단별·소득범주별 실질소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와 전국근로자 가구의

[그림 5] 도시근로자(2인 이상) 1분위계층과 10분위계층의 시장소득 점유율 추이



[그림 6] 전국근로자(2인 이상) 1분위계층과 10분위계층의 시장소득 점유율 추이



소득범주별 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2인 이상 도시근로자의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근로소득은 2% 초반대의 평균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내부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사무직의 경우,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은 각각 2.30%와 2.41%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근로소득은 2.52%의 평균증가율을 기록했다. 상용노무직의 경우도 2.02%, 2.18%의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보여주었고, 근로소득도 2.16%의 평균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와는 반대로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0.73%로 1%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시장소득 증가율을 보였고, 경상소득 역시 1.00%의 평균증가율을 보였으며, 근로소득은 0.61%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임시일

<표 7>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의 변화

(단위: %)

	1996 ~ 2007				2003 ~ 2007			
	도 시	사무직	상용노무	임시일용	전 국	사무직	상용노무	임시일용
총소득	2.13	2.30	1.98	1.16	3.47	3.28	2.56	2.22
경상소득	2.26	2.41	2.18	1.00	1.24	1.22	0.89	0.54
근로소득	2.28	2.52	2.16	0.61	1.08	1.08	0.61	0.42
사업소득	2.07	2.75	2.30	1.61	1.52	2.49	1.17	-3.03
재산소득	-3.93	-2.89	-5.04	8.87	-0.09	1.51	-1.36	1.74
공적이전	17.23	16.00	20.41	37.98	9.52	10.69	12.01	7.29
사적이전	4.88	2.96	11.86	6.49	5.33	3.85	12.76	3.35
시장소득	2.15	2.35	2.02	0.73	1.15	1.16	0.76	0.38
가처분소득	1.96	2.11	1.88	0.81	1.15	1.11	0.88	0.54
가계소비	2.16	2.21	2.12	1.51	1.04	1.05	0.79	0.51
조세(직접세)	3.39	3.05	4.33	3.28	2.91	2.96	1.50	1.52
연금	9.14	7.53	12.33	24.05	1.04	0.79	0.39	0.37
기타 사회보험	10.75	11.81	9.98	7.13	2.48	2.89	1.62	0.42

용직의 낮은 실질소득 증가율은 경제위기 기간의 소득불평등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고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3.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효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은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인 1998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이후 2006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7년 현재는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 모두 소폭 증가한 상태이다(단, 2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 10분위배율은 소폭 하락).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의 경우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어떤 수준인가? 여기에서는 공적이전,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해 본다. 일반적으로 재분배효과는 사적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일차소득의 지니계수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의 비교를 통해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볼 수 있고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지니계수 비

교를 통해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감소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경상소득 지니계수와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의 비교를 통해 조세와 사회보장지출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표 8>과 <표 9>는 공적이전 및 조세, 사회보장부담금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의 감소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은 지니계수를 평균적으로(1996-2007년) 1.0%p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경상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조세는 2.3%p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사회보험료는 -0.3%p, 조세와 사회보장지출은 2.0%p의 추가적인 지니계수의 하락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추세적으로 살펴보면, 공적이전의 경우는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23%p의 지니계수 하락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불평등 감소효과는 경제위기 이후 시점부터 증가해 왔고 2007년 현재 2.86%p의 지니계수 하락효과가 나타난다.

2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공적이전은 1.85%p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경상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조세는 2.12%p, 사회보험

<표 8> 공적이전,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단위 : %, %p)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6~07 평균
일차소득(A)	0.287	0.281	0.300	0.307	0.301	0.308	0.303	0.303	0.311	0.311	0.310	0.315	0.303
시장소득(B)	0.285	0.279	0.296	0.304	0.296	0.303	0.298	0.298	0.304	0.304	0.303	0.306	0.298
경상소득(C)	0.284	0.278	0.295	0.302	0.294	0.300	0.295	0.295	0.299	0.299	0.296	0.299	0.295
경상-직접세(D)	0.277	0.272	0.289	0.295	0.287	0.293	0.288	0.290	0.293	0.292	0.289	0.291	0.288
경상-사회보험료(E)	0.285	0.279	0.297	0.303	0.295	0.301	0.296	0.296	0.300	0.299	0.297	0.299	0.296
가처분소득(F)	0.278	0.273	0.290	0.297	0.287	0.294	0.289	0.290	0.294	0.292	0.289	0.291	0.289
B/A	99.0	99.4	98.7	99.0	98.2	98.4	98.2	98.3	97.5	97.9	97.7	97.4	98.3
C/A	98.9	99.1	98.5	98.4	97.4	97.5	97.3	97.3	96.2	96.1	95.6	95.1	97.3
D/A	96.4	96.9	96.4	96.2	95.1	95.0	95.0	95.5	94.1	94.1	93.3	92.4	95.0
E/A	99.1	99.4	99.0	98.8	97.8	97.8	97.6	97.7	96.5	96.3	95.8	95.0	97.6
F/A	96.6	97.2	96.9	96.6	95.3	95.3	95.2	95.8	94.4	94.0	93.4	92.4	95.3
공적이전효과	0.06	0.28	0.26	0.58	0.77	0.91	0.91	0.99	1.31	1.78	2.17	2.23	1.02
조세효과	2.52	2.21	2.07	2.20	2.33	2.48	2.30	1.81	2.01	2.05	2.26	2.73	2.25
사회보험료 효과	-0.16	-0.22	-0.52	-0.40	-0.31	-0.33	-0.30	-0.38	-0.32	-0.24	-0.25	0.13	-0.27
합 계	2.41	2.26	1.81	2.38	2.79	3.06	2.91	2.42	3.00	3.60	4.18	5.09	3.94

주: 일차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한 것임.

<표 9> 공적이전,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2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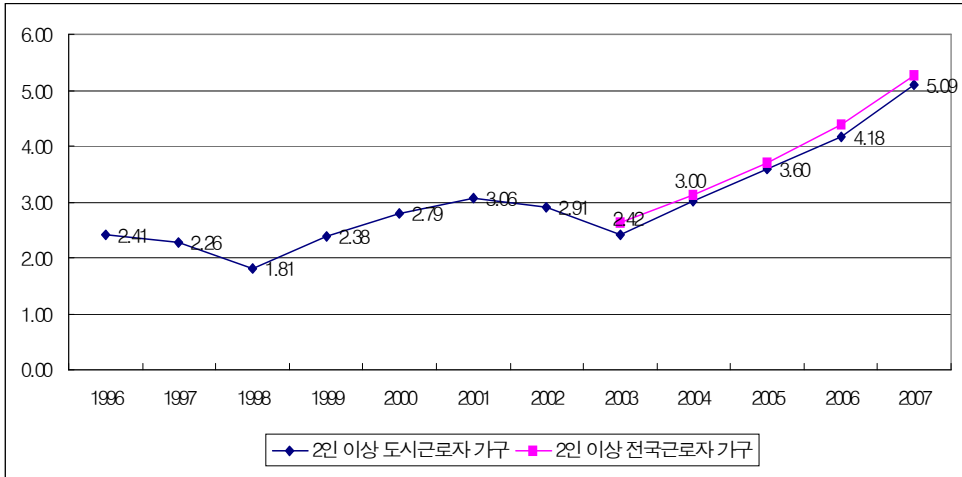
(단위: %, %p)

	2003	2004	2005	2006	2007	03-07 평균
일차소득(A)	0.309	0.316	0.316	0.313	0.317	0.314
시장소득(B)	0.303	0.307	0.309	0.305	0.308	0.306
경상소득(C)	0.300	0.303	0.302	0.298	0.300	0.301
경상-직접세(D)	0.294	0.297	0.296	0.291	0.292	0.294
경상-사회보험료(E)	0.301	0.304	0.303	0.299	0.300	0.301
가처분소득(F)	0.295	0.297	0.296	0.291	0.292	0.294
B/A	98.3	97.4	97.7	97.6	97.3	97.7
C/A	97.2	96.0	95.8	95.3	94.8	95.8
D/A	95.4	94.0	93.8	93.1	92.2	93.7
E/A	97.5	96.2	96.0	95.5	94.7	96.0
F/A	95.6	94.2	93.8	93.1	92.1	93.8
공적이전효과	1.17	1.42	1.96	2.28	2.43	1.85
조세효과	1.76	1.95	1.95	2.28	2.65	2.12
사회보험료 효과	-0.31	-0.25	-0.20	-0.18	0.18	-0.15
합 계	2.62	3.12	3.71	4.38	5.25	3.82

은 -0.15%p, 조세와 사회보장지출의 합은 1.97%p의 지니계수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이전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도시근로자에 비해 전국근로자(2인 이상 기준)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이전지출의 소득불평등 효과는 도시근로자 가구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2인 이상 도시 및 전국근로자 가구의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총합계)를 추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1996년 2.41%p에서 경제위기 시기에 1.81%p까지 낮아졌고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01년 3.06%p까지 증가했으며, 2002~2003년 기간의 하락세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7년 현재 5.09%p까지 증가했다.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경우는 2003년 2.62%p에서 2007년 현재 5.25%p까지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증가했다. 2007년 현재 이전소득과 이전지출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합계는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전국근로자 가구에서 소폭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은 공적이전의 절대빈곤 감소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이전지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일차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적이전은

[그림 7] 공적이전,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추이



<표 10> 공적 이전의 절대빈곤 감소효과

(단위: %, %p)

	2인 이상													1인 이상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기간 평균	2006	2007
도 일차소득(A)	5.44	4.83	8.88	9.76	8.17	6.82	5.65	6.94	7.23	8.14	7.50	7.08	7.20	7.74	7.26
시장소득(B)	4.59	4.05	7.79	8.55	6.90	5.82	4.70	5.90	5.91	6.78	6.17	5.60	6.06	6.31	5.69
도 경상소득(C)	4.50	3.90	7.62	8.19	6.42	5.25	4.17	5.26	5.11	5.70	4.87	4.44	5.45	5.00	4.51
시 B/A	84.38	83.85	87.73	87.60	84.46	85.34	83.19	85.01	81.74	83.29	82.27	79.10	84.00	81.52	78.37
C/A	82.72	80.75	85.81	83.91	78.58	76.98	73.81	75.79	70.68	70.02	64.93	62.71	75.56	64.60	62.12
공적이전효과	1.65	3.11	1.91	3.69	5.88	8.36	9.38	9.22	11.07	13.27	17.33	16.38	8.44	16.93	16.25
전 일차소득(A)								7.69	7.96	8.73	8.01	7.50	7.98	8.23	7.67
시장소득(B)								6.59	6.52	7.30	6.56	5.91	6.58	6.69	6.01
전 경상소득(C)								5.93	5.60	6.14	5.15	4.69	5.50	5.27	4.79
국 B/A								85.70	81.91	83.62	81.90	78.80	82.38	81.29	78.36
C/A								77.11	70.35	70.33	64.29	62.53	68.93	64.03	62.45
공적이전효과								8.58	11.56	13.29	17.60	16.27	13.46	17.25	15.91

8.44%p 빈곤율 감소효과(사적이전의 경우, 16.0%p)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기간(1996~2007년) 동안 사적이전의 절대빈곤 감소효과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공적이전은 같은 기간 1.65%p에서 16.38%p로 공적이전의 절대빈곤 감소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그 효과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그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공적이전은 13.46%p의 절대빈곤율을 낮추는 효과(사적이전의 경우, 18.71%p)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국근로자 가구의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효과가 두드러진다.

<표 11>과 <표 12>는 도시근로자 가구와 전국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상대빈곤 감소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의 빈곤 감소효과는 1996~2007년 기간평균 9.4%p로 나타나고 있고, 시계열적으로는 1998년과 1999년 약간의 감소를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 공적이전은 경제위기 이전에는 상대빈곤 감소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경제위기를 지난

<표 11> 공적이전,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상대빈곤 감소효과(도시근로자 가구)

(단위: %, %p)

	2인 이상													1인 이상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6~07 평균	2006	2007
일차소득(A)	10.35	10.12	11.62	11.62	11.36	11.41	11.13	12.30	13.37	13.77	13.49	14.04	12.05	13.81	14.23
시장소득(B)	9.40	8.67	10.84	10.78	10.19	10.32	10.06	11.29	12.33	12.41	12.25	12.53	10.92	12.52	12.77
경상소득(C)	9.24	8.91	10.76	10.52	10.00	9.72	9.63	10.66	11.59	11.70	11.16	11.21	10.43	11.45	11.48
경상-직접세(D)	9.05	8.57	10.50	10.42	9.87	9.66	9.46	10.43	11.33	11.37	10.98	10.88	10.21	11.25	11.22
경상-사회보험료(E)	9.33	9.02	10.85	10.58	9.83	9.85	9.42	10.73	11.37	11.56	11.15	11.12	10.40	11.37	11.36
가처분소득(F)	9.13	8.17	10.57	10.48	9.63	9.71	9.33	10.55	11.08	11.24	10.84	10.69	10.12	11.03	11.03
B/A	90.8	85.7	93.3	92.8	89.7	90.4	90.4	91.8	92.2	90.1	90.8	89.2	90.6	90.7	89.7
C/A	89.3	88.0	92.6	90.5	88.0	85.2	86.5	86.7	86.7	85.0	82.7	79.8	86.8	82.9	80.7
D/A	87.4	84.7	90.4	89.7	86.9	84.7	85.0	84.8	84.7	82.6	81.4	77.5	85.0	81.5	78.8
E/A	90.1	89.1	93.4	91.0	86.5	86.3	84.6	87.2	85.0	84.0	82.7	79.2	86.6	82.4	79.8
F/A	88.2	80.7	91.0	90.2	84.8	85.1	83.8	85.8	82.9	81.6	80.4	76.1	84.2	79.9	77.5
공적이전효과	1.55	-2.37	0.69	2.24	1.67	5.26	3.86	5.12	5.53	5.16	8.08	9.40	3.85	7.79	9.07
조세효과	1.84	3.36	2.24	0.86	1.14	0.53	1.53	1.87	1.94	2.37	1.33	2.35	1.78	1.43	1.83
사회보험료 효과	-0.87	-1.09	-0.77	-0.52	1.50	-1.14	1.89	-0.57	1.65	1.02	0.07	0.64	0.15	0.54	0.84
합 계	2.51	-0.10	2.15	2.58	4.31	4.65	7.28	6.42	9.12	8.55	9.49	12.39	5.78	9.76	11.74

〈표 12〉 공적이전,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상대빈곤 감소효과(전국근로자 가구)

(단위 : %, %p)

	2인 이상						1인 이상	
	2003	2004	2005	2006	2007	03~07 평균	2006	2007
일차소득(A)	13.06	14.05	14.18	13.96	14.09	13.87	14.22	14.42
시장소득(B)	11.92	12.73	12.74	12.50	12.76	12.53	12.80	13.10
경상소득(C)	11.28	12.00	11.87	11.53	11.34	11.60	11.79	11.64
경상-직접세(D)	11.10	11.70	11.62	11.28	11.09	11.36	11.55	11.46
경상-사회보험료(E)	11.27	11.70	11.71	11.39	11.19	11.45	11.62	11.54
가처분소득(F)	11.12	11.47	11.45	11.07	10.84	11.19	11.27	11.19
B/A	91.27	90.60	89.84	89.51	90.56	90.36	90.00	90.85
C/A	86.37	85.41	83.71	82.56	80.48	83.71	82.94	80.72
D/A	84.99	83.27	81.95	80.81	78.71	81.95	81.24	79.47
E/A	86.29	83.27	82.58	81.55	79.42	82.62	81.71	80.03
F/A	85.15	81.64	80.75	79.24	76.93	80.74	79.28	77.60
공적이전효과	4.90	5.20	6.14	6.95	10.08	6.65	7.06	10.12
조세효과	1.38	2.14	1.76	1.75	1.77	1.76	1.70	1.25
사회보험료 효과	0.08	2.14	1.13	1.01	1.06	1.08	1.23	0.69
합 계	6.36	9.48	9.03	9.71	12.91	9.49	9.99	12.07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5%p대의 효과(2003년은 3.86%p)를 기록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8.08%p와 9.40%p로 빈곤 감소효과가 커지고 있다. 상대빈곤을 감소효과와 폭은 여전히 가족이나 친척(이웃) 등의 사적영역에서의 소득이전에 의해 크게 나타나지만, 최근 사적이전의 상대빈곤 감소효과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는 반면,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효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1996-2007년 기간평균 3.9%p의 추가적인 상대빈곤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3년 이후 정부주도의 재정지출 상대빈곤의 감소효과가 두드러진다. 조세의 상대빈곤 감소효과는 경제위기 시기에 다소 하락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세를 통한 상대빈곤 감소효과는 1.8%p 정도이며, 조세와 사회보장지출의 합은 2.0%p 상대빈곤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적이전은 6.7%p 상대빈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공적이전의 상대빈곤을 감소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조세의 상대빈곤 감소효과는 1.8%p, 사회보험료는 1.1%p의 추가적인 빈곤 감소효과가 있다. 1인 이상 전국근로자 가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가 낮아지는 반면, 공적이전의 효과가 2006년(7.06%p)에 비해 2007년 10.12%p로 크게 확대된다. 이전지출(조세와 사회보장지출)의 상대빈곤 감소효과는 2.93%p에서 1.94%p로 다소 감소하지만, 이 시기 공적이전의 큰 증가에 힘입어 이전소득과 이전지출에 의한 전체 상대빈곤 감소효과는 2006년 9.99%p에서 2007년 12.07%p로 증가한다.

IV. 맺음말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확대 및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는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세습화(고착화) 등의 다각적인 논의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불평등과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분배 현황은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공적이전이 빠르게 증가했고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복지지출이 증가 등을 통한 적극적인 분배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본고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적 최근의 소득분배 현황과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소득범주별 분위배율과 점유율, 지니계수, 절대적·상대적 빈곤율 등의 지표를 통해 최근의 소득분배 현황과 불평등 정도를 파악한 결과, 경제위기 동안의 악화된 분배지표의 개선이 2000년과 2002년에 걸쳐 일어나다가 2003년 이후 다시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2006년 다소 완화를 보인 분배지표는 2007년에 다시 악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분배상태는 개선되는 경향이 보이지만 시장소득의 분배율의 확대나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03년 이후의 분배율의 확대는 하위 20%(1분위) 저소득계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평균증가율을 밑도는 낮은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가족 및 친척(이웃) 등의 사적이전의 효과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도시근로자 가구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효과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병화·강신욱 외(2007)의 지적처럼 정부차원의 재분배정책의 효과증대와 함께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때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비정규직의 확대와 근로빈곤을 비롯한 저임노동의 확산, 실직위험의 증가 등의 고용악화 상황은 시장소득의 분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향후 소득분배의 대한 대응은 적극적 재분배정책의 일관된 기초하에 일차소득의 안정적인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참고문헌>

- 원종학·성명재(2007),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이병희·강신욱 외(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추이 분석」,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이정우(1997),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